

“盧도 선거개입으로 탄핵”...한국당 ‘文권력게이트’ 맹공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모든 의혹은 청와대로 통한다”

“정부여당, 정당한 필리버스터 인정 안 해...의회독재”

자유한국당은 3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사망 이후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하명수사’ 등 청와대발 의혹들에 대해 내년 4·15총선 ‘부정선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오후 국정조사 실시요구서를 바른미래당과 함께 제출하고 압박 수위를 높일 태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대로 방치한다면 내년 4·15 총선은 부정선거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여당은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변명·개변으로 검찰 수사 때문에 물아가는데, 또 시작된 검찰 죽이기”라며 “유재수 의혹도 카르텔을 드러내고 울산시장 사건은 경남 포함 전국 단위 부정선거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부담과 유재수 전 부산시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능력이 우리들병원 거액 대출 관련 금융농단 등 3건에 대한 국조요구서를 바른미래당과 함께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백운우 별동대 특감반원 관련자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어떤 말 못 할 사정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규명하려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청와대의 습관적 거짓말을 밝히기 위해서도 국정조사는 필요하다. 의혹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허위진술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덧붙였다.

안상수 의원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

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 한마디로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긴 했지만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한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국기훼손이라는 걸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들이 주장했던 민주가 자기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당 이름도 민주당 아닌가. 민주당 의를 파괴하고 국기를 파괴하는 이런 이들에게 나라를 맡겨야 하는가”라며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서 끝까지 파헤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중 의원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옛말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의혹은 청와대로 통한다”며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과 청와대, 정부여당을 국정 파탄세력, 좌파 독재 정권, 파렴치 정권으로

규정하고 규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악화되고 있는 정국국회 교착정국을 놓고 ‘정부여당책임론’을 제기하며 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수용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전날 민식이법 등 정국국회 핵심민생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한국당 책임론’을 제기한 문 대통령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쓰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야말로 그러고 싶다”며 “아이들 안전법안을 불모 삼아 야당을 무력화하려 하지 말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불법 부의(토론에 부침)에 이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의 불법 부의를 강행 중인데, 이들은 합법적인 필리버스터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것이 의회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 의회 독재란 말인가”라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손뼉맞을 듣고 필리버스터 보장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재익 의원은 “아제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률을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며 “참으로 지당한 말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국정에 대해 알고나 있는지, 청와대 참모들은 발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대통령 말씀자료를 준비하는지,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은 거의

‘멘붕’ 상태가 아닐까. 국정에 대해 전혀 무지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민식이법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는 문 의장과 민주당이 야당의 정당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이것을 마치 한국당이 반대해서 발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대통령 말씀자료를 준비하는지,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은 거의

이낙연 ‘최고치’ 27.5%, 황교안 20.4%...격차 벌어져 오차범위 밖

리얼미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3위 조국 빠진 자리에 이재명 8.4%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20%대 후반으로 조사돼 2위 황교안 대표와의 격차를 오차범위 밖으로 벌리며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5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6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

서 이낙연 총리에 대한 선호도는 27.5%로 역대 리얼미터 조사에서 나온 이 총리의 선호도 중 최고치다.

6개월 연속 1위를 기록한 이 총리 선호도는 직전 조사인 11월보다 3.8%p 올랐다.

이 총리 선호도는 대구·경북(TK)과 충청권, 경기·인천, 서울, 40대와 30대, 50대, 60대 이상, 진보층과 중도층, 보수층, 민주당·한국당 지지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올랐다.

2위인 황 대표는 직전 조사보다 0.4%p 오른 20.4%를 기록하며 6개월째 20% 초반대를 횡보했다. 이 총리와의 격차는 전달 3.7%p에서 오차범위(±2.0%p) 밖인 7.1%p로 벌어졌다.

경기·인천과 호남, 부산·울산·경남(PK), 40대와 20대, 50

대,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 상승한 반면 서울과 TK, 충청권, 60대 이상과 30대, 중도층에서는 하락했다.

직전 조사에서 3위였던 조 장관은 검찰 수사가 지속됨에 따라 조사를 의뢰한 언론사와의 협의로 후보군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지난달 4위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달보다 2.1%p 오른 8.4%로 3위를 기록했다.

4위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는 0.6% 내린 4.7%로 4위였다.

이어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4.0%),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대표(3.6%), 심상정 정의당 대표(3.3%), 김경수 경남지사(3.1%),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3.0%), 박원순 서울시장(3.0%), 오세훈 전 서울시장(2.4%),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1.9%), 김부겸 민주당 의원(1.8%), 원희룡 제주지사(0.9%) 순으로 나타났다.

대안신당 “청와대는 차라리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라”

대안신당(가칭)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중심에 선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두고 “차라리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라”고 논평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청와대 개혁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는 민정수석실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을 둘러싼 사건의 전모를 공개하고 선제적으로 강하게 조치할 것은 조치해야 한다”며 “청와대 대변인의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아리송한 해명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불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은 민정수

석실을 둘러싼 동시다발적 경마식 보도에 경악하고 있다”면서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했던 조국 사태를 연상시킨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도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구시대적 유물인 민정수석실 건판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는 없다”고 민정수석실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검찰의 무리한 ‘별건수사’ 가능성을 제거하고 나선 여당을 향해선 “여권 일각의 검찰 탓은 제2의 조국 사태를 예고하는 것”이라며 “달은 애써 못 본체하며 손가락만 쳐다보지 말고 보다 근본적 대책을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